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도시 활력

전주시, 규제 합리화 ·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펼쳐... 정비사업 신속 추진 등 가시적 성과

전주시가 민선8기 들어 각종 규제 합리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면서 각종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규제 합리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최근 각종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다양한 악재로 인해 표류하는 상황에서 △상한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도간격 완화 등 현실 여건에 맞게 규제 합리화를 추진,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불어넣었다.

실제로 이러한 규제 합리화로 인해 조합원은 사업성 향상으로 분담금 부담을 덜게 되고, 정비구역 인근 지역



전주시가 민선8기 들어 각종 규제 합리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면서 각종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거구역 항공사진)

주민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재개발사업에서 상가 조개기에 의한 투기로 임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임주민 권리 보

호를 위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을 고시하는 등 제도 개선과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재개발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됐으며, 전리중교와 병무청 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민강좌 개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조합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합장 간담회 및 조합 현장 방문의 날 운영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면서 이전에는 빈번하게 발생했던 다수인 민원과 각종 분쟁이 현재 대폭 줄었다.

이외에도 시는 법령 개정 사항 중 조례 위임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는 등 법령 개정에 발빠르게 대응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2년 연속 주거복지 '우수'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잘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시는 17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주거복지 성과 평가의 주거복지센터 운영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하는 주거복지대전은 해마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관련 학계·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로 올해 2회째를 맞이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우수사례' 분야에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혁신적인 모델을 선보여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실제로 시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제공 △긴급 임시거처 순환형 임대주택 운



주거복지 대전원, 국민과 함께 펼쳐 갑니다. 2025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전주시, 우수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영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 △연탄 사용 가구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저탄소 주택난방플랫폼 운영 △주택 임대차 무료 법률상담 운영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시는 주거복지센터와 협업해 민·관·공·산·학 28개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인 '저탄소 주택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탄보일러 사용 60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가구별 주거 서비스 욕구에 따라 △탄소 난방 및 태양광 설치 △집수리 △노후 전기 안전 점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 주거 취약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희성 기자

전주지역 중소기업 7개 제품 바이전주 우수상품 신규 인증

전주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가공된 우수한 제품들이 전주시 품질을 보증하는 바이전주(BUY전주) 우수상품으로 새롭게 인증을 받았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상품 발굴과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전주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7개 제품을 바이전주(BUY전주) 우수상품으로 신규 인증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기존 바이전주 우수기업 17개사의 제품을 재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인증된 제품은 △고려 자연식품(주)의 '밭골' △쥬메디엔리서치의 '저스트비미 여성초 리바이탈 에너지' 스킨케어 라인 등으로, 품질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선정됐다. 시는 이들 바이전주 우수상품 선정 업체에 우수상품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우수상품 홍보 및 각종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선정업체들은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시 최대 3억 원까지 3.5%의 이차보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바이전주 인증기업이 전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속도

광역교통도시 도약 발판 마련

전주시가 민선 8기 들어 광역교통정책의 핵심 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법'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이 이끌어내면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민선8기 전주시의 대표적 성과로 손꼽히는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주권이 광역교통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17일 밝혔다.

대광법 개정은 수도권·광역시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정책을 지방 중추도시까지 확대하는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은 대광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시 국비 지원이나 정책 연계에서 소외돼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전주시도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 지난 10월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군산·김제·완주가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는 전주권으로 신설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광역도로·광역철도·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에 대해 국비



전주시는 올해 민선8기 전주시의 대표적 성과로 손꼽히는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주권이 광역교통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17일 밝혔다.

30~7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정됐다.

또한 시는 법 개정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관계 시군, 전북연구원, 전주시정연구원 등이 참여한 광역교통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주권의 광역교통 수요 분석 △사업구상 △국가 계획 반영 논리 보강 등 실무적인 작업을 긴밀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총 2조1916억원 규모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돼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사업계획에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완

주와 김제, 익산, 군산을 잇는 광역도로, 광역철도를 비롯해 광역차고지, 환승센터 등 총 15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은 △전주 예곡시도~완주 삼봉지구 도로 확장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 신설 △전북권 광역철도(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등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환승 체계 촘촘히 구축되면, 전주와 인근 도시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전주권 광역 생활권의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외국인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 위한 TF회의 개최

전주시가 중국인 무비자 확대 등 최근 외래관광객 증가와 국제관광 회복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치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시는 17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주재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TF출발 킷아웃회의에 이어 열린 첫 번째 공식 회의다.

특히, 이번 회의는 중국인 무비자 확대와 한일령 등 최근 정부의 중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조치와 무비자 입국 확대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에 집중된 외래관광객을 전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 관계부서와 전주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전주시정연구원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외국인관광객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외국인관광객 수용여건 개선 및 환대분위기 조성 △타깃별 방문상품 개발·상품 판매를 위한 관광콘텐츠 발굴·홍보 △마케팅, 한지, 고유축제 등 전주의



특화된 문화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주시관광상품 플랫폼 확장 △전주 스토리 다이닝 미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 수용 태세 개선 대책 등에 대해 머리를 맞췄다. 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주시 외국인관광객 유치 TF'를 앞으로 매주 1회 정례적으로 열고 추진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K-컬처 열풍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는 이 시점이야말로 전주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국·외 관광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유치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